


정책연구과제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옥
부서/과제담당관	복지정책과 / 김혜진 과장	담당공무원	서기관 장은섭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2015.9.17. ~ 2015.12.4. (약 4개월)		
연구결과	<p>○ 현 차상위층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통합급여에서 욕구별 급여로 급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차상위 계층 개념 규정의 모호함 확인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선이 일치하는 문제 - 차상위층의 규모가 욕구별 급여제도에 상이할 수 있는 문제 등 확인 - 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층간 수급 지위가 역전할 가능성이 발견됨. <p>○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마다 차상위 선정 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수급 규모의 확대가 실증적으로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제도는 1.17%p, 장애(아동)수당은 0.55%p, 건강보험료 부담경감제도는 0.66%p, 자활급여는 0.66%p, 차상위자격확인제도는 0.55%p 대상자 규모의 증가. <p>○ 주요 차상위 제도의 자격기준 변화 위한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차상위 개념의 폐지와 제도별로 상이한 차상위와 비유사한 기준선 설정 필요. - 단기적으로 개별 관련 제도별 제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와 다른 자격요건 엄격 적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차상위 기준 폐지 검토 필요 - 차상위 자활급여-생계급여 이외의 타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자활사업 추진방안 마련 필요 		

평 가 결 과		<p>○ 정책연구용역 최적화의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책연구 용역은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 개념의 규정 및 소득-재산기준을 검토하고, 차상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선을 욕구별로 차별화할 필요성이 없는 지 검토하는 것임. - 연구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연구 용역의 취지에 부합하게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른 현 차상위개념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차상위개념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 및 차상위지원제도별 기준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p>○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용역의 시급성,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정책 용역을 위탁형 용역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p>○ 계약내용에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맞춰서, 연구내용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방법도 적절하게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도 과업내용서에 조응하여 제시하고 있는 등 계약내용에 충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p>○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연구결과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차상위 지원사업별(차상위자격확인사업,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사업,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등)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차상위 지원사업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평택대학교 손병돈 교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혜진 과장